

수도권 규제완화 뚫고 12개사 유치 성공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뚫고 수도권 7개사를 포함, 모두 12개 유망기업으로부터 2700억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지사는 5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 등 7개 시·군 시장·군수, 조경희 (주)바디프랜드 대표 등 12개 기업 대표이사과 함께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2개 기업은 도내 7개 시·군 산업단지 내 46만 7286㎡ 부지에 모두 2674억 원을 투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새롭게 공장을 설립한다.

우선 공주지역에는 (주)바디프랜드와 (주)원스텐, 성화전기공업(주) 등 3개 기업이 새 터를 잡는다.

안마의자 전문 생산 기업으로 유명한 (주)바디프랜드는 2018년까지 272억 원을 들여 월미2농공단지 내 3만 5306㎡의 부지에 신규로 공장 세운다.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 제조기업인 (주)원스텐은 탄천산단 1만 8942㎡의 부지에 2017년까지 105억 원을, 송전용 철탑을 생산하는 성화전기공업은 탄천산단 9만 2303㎡에 2018년까지 215억 원을 투입해 각각 공장을 신설한다.

반도체장비 업체로 수도권에 위치한 (주)나우이엔지는 2017년까지 아산 제2테크노밸리 내 2만 5236㎡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기로 하고, 총 135억 원을 투자한다.

또 인발파이프 생산 기업인 광성장광공업(주)은 2018년까지 137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 및 공장을 서산인더스밸리 내 3만 3057㎡ 규모의 부지에 이전한다.

냉간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는 (주)대흥코스텍은 당진 송산2산단 1만 6528㎡의 부지에 공장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 207억 원을 투입하고, 페인트 제조업체인 한진화학(주)은 당진 합덕산단 2만 8379㎡에 201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프린터 전문기업인 (주)우심시스템은 홍성 일반산단 3만 4755㎡에 2018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하고, 상업용 냉장설비 전문업체인 오텍 캐리어냉장(유)은 예산 고덕농공단지 3만 1665㎡에 내년까지 117억 원을 투입, 수도권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각각 옮긴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기업은 300억 원을, B사는 400억 원을, C업체는 280억 원을 각각 들여 천안과 아산 지역에 3만 6000㎡~6만㎡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12개 기업들은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도 약속했다.

도는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도내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생산 유발 362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340억 원, 고용 유발 2260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2855억 원의 생산액과 637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신규 고용 창출은 1695명으로 전망했다.

‘자원 풍성한 충남’ 신·재생에너지 키운다

충남도가 환경위기 극복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도내 연간 전기소비량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민자투자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와 검토보고서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총 1864곳에서 추진돼 생산가능용량이 623 MW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331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허가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불이행 과징금 부과에 따른 발전사들의 구매수요 증가, 태양광 모듈 등 단가 하락 등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활발했으며 이어 바이오에너지(19%), 소수력(4%)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규모별로는 REC 가중치에 따른 저용량 선호 양상으로 500kW이하 허가건수가 1667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태양광 보급이 용이한 평야지역인 논산(354건), 부여(216건), 공주(160건), 서천(156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이 활발하며 산지가 많은 계룡(4건)과 청양(52건)은 부진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도내 연간 전기소비량(4만 5466GWh)의 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오는 2020년까지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도는 태양광에 편중된 신·재생에너지를 농산부산물과 축산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해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 범주 내 허가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발전 사업허가 문턱을 낮추고 허가 검토보고서 등의 개선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 및 산업부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

과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농산부산물과 축산폐기물 등 바이오 에너지 가용잠재량이 매우 높아 사업

자들의 참여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민자투자 유치를 통해 충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제비전, 도민과 함께 완성한다.

충남도가 ‘충남경제비전 2030’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시·군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충남경제비전은 21세기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충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으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충남경제의 15년 후(2030년) 비전을 제시하고,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지방재정 등을 고려한 실행전략을 담게 된다.

설명회는 5월 26일 태안군, 27일 서산·천안시, 6월 2일 예산군·아산시, 4일 홍성군, 5일 서천·금산군, 8일 공주시, 9일 청양·부여군, 10일 보령·당진시, 11일 논산·계룡시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각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등이 참가하며, 충남경제비전 초안 설명에 이어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충남경제비전 초안은 ▲창의적 인재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수소밸리 조성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복합주거문화 휴양도시 조성 등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산

업 육성 등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군 설명회와는 별도로 충남경제비전 초안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6월 15일까지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중견 기업인과 대학 산학협력단장,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충남경제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충남경제비전 수립을 위해 학계와 기업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충남경제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지사·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가동 중이다.

또 도 경제산업실에 경제비전TF팀을, 충남연구원에 경제비전연구단을 각각 구성, ‘민+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충남경제비전을 마련, 오는 7월 9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팎에 알리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